

국민경제자문회의-존스홉킨스大 SAIS

「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남북경제협력방안」 세미나 개최
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존스홉킨스 대학 SAIS*, 대외경제연구원(KIEP), 한국개발연구원(KDI)과 공동으로 5월 8일(목) 미국 워싱턴 D.C.에 소재한 SAIS 국제관계대학원에서 「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남북경제협력방안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함

* SAIS(Paul H.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): 1943년에 존스홉킨스대에 설립된 국제경제학, 국제법, 지역연구 등 국제연구 분야 대학원

- 이번 세미나는 「경제혁신 3개년 계획」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‘통일시대 준비’와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지난 3월 ‘드레스덴 선언’에 대한 실현방안을 한국·미국의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
-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‘부담·비용’에 주목했던 통일과 남북경협에 대한 관점을 ‘혜택·편익’이라는 측면에서 남북경협의 기대 효과와 발전전략, 통일비용과 편익 등을 조명하고,
 - 재원조달, 협력사업 등 남·북을 넘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과 참여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
 - 아울러, 시장경제 이행사례 및 독일 통일의 시사점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향후 남북경협의 방향, 중점분야 설정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
-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통한 남북경협, 그리고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구체화하는 한편,
- 앞으로도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, 합의과정이 필요한 통일, 남북경제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임

※ < 별첨 > 발표 요약 및 주요 내용

1. 북한의 현시비교우위지수(RCA)와 남북경협에의 시사점

- 윤덕룡 KIEP 선임연구위원

- 전체수출 시장에서의 특정 수출품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**RCA지수***를 기반으로 볼 때 **북한의 무역 경쟁력은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**

*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: 특정국의 총수출 중 특정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세계수출에서 차지하는 해당품목의 비중으로 나눈 것으로,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국의 해당품목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

- 북한의 해외무역은 중국 및 자연광물 가공품 등 특정품목의 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
- 북한의 대외무역은 규모면에서 경제적 붕괴이전인 1990년 수준을 2010년에 들어 회복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서 지금은 체제전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“J-커브”를 그리고 있음.
 - 대외무역 증가에도 경제회복이나 안정적 성장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원을 팔아 생필품을 수입하는 무역구조 때문
- 북한의 대중교역 증가는 자원수출 중심이어서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을 지연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제약하는 역할
 -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단순한 경공업 제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내 제조업부문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.
- 북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방법은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·확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법
 - 남-북 간 무역에 대한 북한의 RCA 지수에 따르면, 개성 등 일부 지역에 한정적이었음에도 한국은 이미 북한의 산업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치적 여건 개선을 통해 확대 필요

2. 북한의 경제현황과 남북경협에의 시사점

- 이종규 KDI 부연구위원

- 북한의 경제확보 채널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상황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한 상황
 - (대중무역)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中 의존도 및 무연탄·철광석의 수출비중은 더욱 높아진 상황 → 외부충격(북한산 수요감소, 제4차 핵실험 등)이 가해질 경우 경제에 충격이 예상
 - (노동력송출) 최근 중국으로의 노동력 송출 급증 → 개혁 및 개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 가중
 - (비공식부문) 북한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북한당국이 효과적으로 흡수 → 계획부문의 축소 역시 정치적인 부담
 - (경제개발구) 13개의 경제개발구 및 1개의 경제특구를 추진 → 당국이 스스로 불확실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실패를 반복
-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는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남북한 소득·노동·자본의 격차를 해소하는 '전략적 남북경협'이 필요
 - (노동) 국제사회를 통한 정례 인구센서스, 인구조사 펀드 운영과 개성공단을 통한 노동력 재교육 등 노동의 양과 질 확대 추진
 - (자본) 경제특구에 대한 한국지역으로부터의 인프라 공급 등 추진
 - (소득) 대북무역 확대를 위한 중국 등 협조 강화, 남북협력기금·한국형 ODA를 통한 국제적 북한 시장화 등 지원 추진
-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(노동)과 북한(자본)의 관심(interest)의 차이를 인지하고, 이를 좁혀 나가려는 노력을 경주
 -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협력이 가능한 분야(노동)부터 추진
 - 한국 내에서는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것을 합의(consensus)하는 한편, 북한 당국에게는 이를 통해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음을 인지도시킬 필요

3. 통일 대박을 위한 사전준비

- 안중범 국회의원

- **통일은 비용 뿐 아니라 유·무형의 항구적 편익이 발생하므로 통일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, 편익을 극대화함으로써 '통일 대박'이 가능**
 - 기존의 통일연구는 비용에 집중되어 있어 국민에게 통일은 부담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, 북한의 GDP 수준을 남한 GDP의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비용을 추계하여(거시적 비용추계) 연구자에 따른 큰 편차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없다는 문제 발생
- **통일 비용을 항목별로 추계(미시적 비용추계)하여 각 제도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, 이를 바탕으로 비용 최소화하고,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**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
 -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 인구와 통일을 고려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함.
 - 각종 사회안전망 제도는 현금급여 위주에서 서비스 제공형으로 전환하여 재정부담은 축소하고, 대상자의 사회 적응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.
 - 인프라 구축과 같이 향후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는 민간자본의 참여를 추진,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재원 조달에 용이함.
 - * 민간재원 활용 통로로 프로젝트파이낸스(Project Finance: PF)와 (가칭)통일 투자은행의 설립과 활용을 검토 가능
 - 아울러, 효율적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재원조달가능지수를 개발해 활용할 것을 제안
- **통일준비위원회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한 각 부처별 통일대비 컨틴전시 플랜 수립 작업에 착수해야 함**
 - 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, 통일 및 북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여야 함.

4. 독일 통일이 한국통일에 주는 시사점

- 이석근 롤랜드버거 대표이사

- ☐ 롤랜드 버거사는 통독직후 1990년부터 4년간 동독 기업 대부분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추진한 THA (Treuhandsanstalt) 활동에 깊게 관여
- ☐ 본 경험을 바탕으로, 통일의 효익을 창출해내는 주요 수단인 기업 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THA가 어떤 구조와 운영 원칙으로 기업들을 분류하고 구조조정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게끔 하였는지를 통독 후 발생한 광범위한 경제적 효익과 더불어 상세히 설명할 계획
- ☐ 그리고 통일 후 특히 동독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기 위한 5가지 방안으로 자유 경제 체제의 확산과 관료주의 지양, 이노베이션 클러스터, 미래지향적 경제구조, 융통성있는 노동시장, 지속적 인프라 투자 등을 언급하고 이를 향후 통일 한국을 위한 시사점으로 제안
- ☐ 마지막으로, 남북통일에 대해 시나리오적인 접근법에 따라 산업 및 기업, 천연자원, 인구, 물류 등 인프라의 병합, 국가 위험도 저하에 따른 각종 신용지수의 개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시너지를 예상해 보고, 단계적 경제 개방의 장단을 더불어 설명
- ☐ 이외에 통일재원 조달 방법과 정부, 지자체, 기업, 산업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함과 이러한 준비의 취합과 조정을 통한 범 국가적인 체계가 설립되어야함을 강조

5.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

- 정형곤 KIEP부원장

- '90년대 시장경제로 이행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이행 과정에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분석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
 -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주의적 경제적 초기 조건들이 북한의 경우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급진적 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움
 - 북한은 유일지배체제, 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, 주변국과의 갈등 상황 등 비경제적 초기조건 역시 북한의 급진적 경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
 - 북한이 처한 현재의 정치, 경제적 초기조건을 고려할 때 큰 정치적 변화가 없는 한 점진적 개혁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음
 -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도모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짐
 - 체제전환 이전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 간 상호 경제의존도가 높아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적 충격이 컸던 반면, 북한은 이런 영향을 우려할 필요가 없고,
 -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,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원과 투자, 북한주변의 세계 최대의 시장 등은 북한이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임
- 현 상황에서 북한은 개혁개방을 위한 초기조건을 유리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, 특히 북한경제의 대외 개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
 - 최근 북한이 지정한 경제개발구를 포함하여 개성, 나선, 신의주 등 전략적 경제특구에 한해 완전한 개방과 시장을 도입하되,
 - 이외의 지역은 특구와의 연관 산업을 집중 육성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함